

전북클러스터 분양 본궤도

혁신도시 내 실태조사 결과 179개 기업 입주 확인... 클러스터 분양율 94.7%

전북혁신도시 내 입주기업 통계가 그동안 저조하게 잡혔던 것과 달리 실제로는 179개 기업이 입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0일 전북도(도지사 송하진)에 따르면 전북혁신도시에 입주해 있는 기업은 산학연 클러스터안에 2개 기업과 클러스터 밖에 있는 177개 기업을 합쳐 모두 총 179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북혁신도시 입주기업 통계가 저조하게 잡힌 원인은 전북혁신도시는 클러스터 내 도의 입주 승인을 받은 기업만 주목하고, 입주 승인이 받지 않아도 되는 클러스터 밖 기업은 제외하면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하지만 전북도는 지난 7월 타 시도 혁신도시 입주기업 현황을 입수 분석한 결과 클러스터 안과 밖에 있는 모든 기업을 통틀어 잡은 것을 인지하고, 즉시 전북혁신도시내 클러스터 안과 밖에 있는 입주기업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전북혁신도시에 200여개의 기업이 입주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를 국토부 통계에 반영하도록 건의한 결과, 179개를 반영하기로 결정했다는 회신을 최근 국토부로부터 받았다.

실제로 전북혁신도시에는 수도권에

있던 공공기관이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하기 시작한 2013년 이후부터 매년 꾸준히 입주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들 기업 중 23개 기업은 수도권 또는 타시도에서 이전해온 기업이고, 12개 기업은 전북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안에 입주해 있는 기업이라고 전북도 관계자는 밝혔다.

도 관계자는 전북혁신도시에 이전해온 공공기관과 관련된 기업이 혁신도시 안팎만 아니라 혁신도시 밖 시군에 입주한 규모있는 기업도 11개에 이르고 있으며, 소규모 기업은 훨씬 더 많이 입주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혁신도시조성 효과가 도내 시군으로 점점 확산되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는 귀뜸이다.

한편, 전북혁신도시에 조성된 산학연 클러스터는 전체면적의 99% 정도가 분양이 완료되었거나 분양계획이 확정되어 있으며, 아직 분양을 기다리고 있는 면적은 전체면적의 5% 수준인 1만2,262여㎡(3,700여평)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계획이 확정된 클러스터의 경우, 전북혁신도시에 이전해온 기관들의 산하기관, 국립문화재연구소 입주 등 공공의 용도로 대부분 활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클러스터에 입주하기로 한 테

크비즈니스센터, 국제금융센터, 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 등이 입주를 위해 착공 또는 착공을 준비 중이며, 착공했다더라도 아직 준공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클러스터 실입주는 20%대(30.5만㎡)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지만 2023년이면 입주율이 100%에 달할 전망이다.

올해 5월 착공하여 추진 중인 테크비즈니스센터가 21년 완공되면 창업보육공간과 함께 기업입주 임대공간(약 30호실) 등 산학연이 함께 교류, 소통하는 비즈니스장이 마련되어 기업유치가 가속화될 예정이다.

또한, 전북금융타운의 핵심인 전북국제금융센터(JIFC)가 23년 완공되어 금융 관련 기업의 입주공간(약 79호실-예정), 업무면적시설 등이 들어서게 되면 전북금융산업 활성화는 물론 금융기관이나 기업유치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유희숙 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 "현재 전북혁신도시의 산학연 클러스터는 거의 분양이 완료되었고, 입주기업도 혁신도시 안팎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전북혁신도시를 대한민국 농생명·금융혁신성장 허브로 만들어 혁신도시 조성 효과가 도내 모든 시군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전북 농수산물 수출 증가율 전국 2위... 전국대비 4.8배 앞서

2019년 8월(누계) 전북도 농수산물 수출액이 전년 동기대비 16.0% 증가한 2억 4,391만 달러로 전국의 평균 수출 증가율 3.3%의 4.8배로 경북(17.5% 등)에 이어 전국 2위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전북도 올해 수출 목표액은 2019년 대비 10% 증가한 3억 4천만 달러로 이 같은 증가세를 꾸준히 이어간다면 금년도 수출 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류별로는 가공농식품(38.9% 등)과 축산물(19.6% 등)의 증가폭이 컸으며, 신선농산물은 대만 등으로 수출이 늘어난 양파(167만4000 달러, 261.6% 등)가 증가세를 이끌어 전년 동기대비 2.7%가 상승했다.

가공농식품은 전년도부터 對 중국 수출이 꾸준히 늘어난 면류(44,792천 달러, 41.8% 등)가 상승세를 주도하여

전년 동기대비 38.9% 증가했다.

축산물은 AI로 중단되었던 닭고기(1285만5000 달러, 35.5% 등)의 베트남 수출이 전년도부터 재개된 뒤 수출 확대를 주도하여 19.6%로 증가세를 보였고, 홍콩 등으로의 쇠고기(57만4000 달러, 21.0% 등) 수출도 향후 전망이 밝다.

수산물에는 마른김(3968만6000 달러)이 중국, 일본 그리고 러시아와 베트남으로의 수출이 증가했지만 對 태국과 미국 수출이 줄어 26.8%가 감소했고, 조미김(3515만9000 달러)은 중국으로의 소폭 하락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일본, 미국이 증가세를 보여 19.1%가 증가했다.

면류(2559만8000 달러, 50.7% 등)의 수출 증가세에 따른 중국이 6710만 5000 달러(51.3% 등)로 전북도 농식품 수출국 1위의 자리를 2019년도에도 지

속적으로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품목으로는 조미김(1715만2000 달러), 기타 농산가공품(600만5000 달러) 등이다.

한·일 무역갈등으로 여러 우려가 있음에도 동물사료(794만8000 달러 20.453% 등)의 큰 폭의 수출 증가세에 힘입어 일본이 수출액 3920만8000 달러로 46.2% 증가하여 2위를 차지하였으며, 주요 품목으로는 마른김(910만 6000 달러), 파프리카(613만7000 달러) 등이다.

조호일 전북도 농식품산업과장은 "세계적인 보호무역 추세와 미·중 무역갈등에 이어 일본의 무역보복 등 대내외 수출 여건이 어려워진 상황이지만 제값 받는 농업 실현을 위해 인도 및 동남아 시장 개척 등을 통한 시장 다각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지방재정의 자율성 강화한다

도, 제42차 전북재정포럼 개최

정부의 재정분권 2단계 추진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북재정포럼이 정읍시청에서 개최되었다.

도는 지난 30일, 정부의 '재정분권 2단계 추진에 따른 전라북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재정분야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2차 전북재정포럼(대표 전북대 안국찬 교수)을 정읍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작년 10월 30일, 정부는 지방소비세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발표했고, 현재 1단계가 마무리되고 관련 법안 개정을 추진중에 있다. 또한, 2단계 재정분권을 추진하면서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

기 위해 지방재정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계획에 따르면, 2단계 재정분권은 국세-지방세의 조세 배분 구조 목표를 70%:30%로 잡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세의 추가적인 지방이양을 검토할 예정이라는 구상이 제시됐지만 아직 구체적 실행계획은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따라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향에 대한 모색과 지방정부의 대응방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수렴이 더욱 중요한 상황이다.

포럼에 참석한 위원들은 정부의 2단계 재정분권 추진과 관련해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분석과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조기현 박사는 "2단계 재정분권은

지방교부세 폐지 및 지방분권제 도입이 될 경우 1단계와 달리 전북도에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지방분권제는 서울, 경기 등 불교부단 체도 배분 대상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방교부세와 비교할 때 전북도 세 입에는 불리하다"며 "포럼, 세미나 등을 통해 관계 전문가와 함께 신속한 상황판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상규 도 기획조정실장은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 방향을 미리 파악하고, 지방재정 확보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한 후, "포럼위원분들이 제시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에도 및 시군에 끼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재정포럼'은 2008년부터 11년간 42회째를 이어오면서 재정정책 주요 현안 대응 및 지방재정 효율화 방안 마련 등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 진안 지역 CEO와 함께 현장 소리에 귀 기울여

전북도는 지난 30일 진안 마이튼에서 도, 진안군, 전북중소벤처기업청,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진안 중소기업 및 농공단지협의회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안지역 CEO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북도와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이 추진하는 '2019년 전북도 중소기업 대표자 협의회 운영 사업'의 일환으로 도내 중소기업의 지역 간 네트워크 구축과 기업 애로 사항 해소를 위해 만들어진 지역별 CEO 간담회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진안지역 농공단지협의회와 연계해 기업들이 현장에서 맞닥뜨리고 있는 어려움을 직접 경험해 애로사항을 최대한 해결해 주기 위해 노력하였고, 향후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 발굴을 위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다.

도는 이날 참석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전북도가 추진 중인 중소기업 정책 자금, 판로개척, 수출지원 등 주요



전북도가 지난 30일 진안 마이튼에서 진안지역 CEO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업에 대한 안내도 함께 진행했다.

전북도는 이날 현장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과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해 정책으로 반영해 나가는 동시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전라북도가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꾸준히 마련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

역경제 활성화와 방안을 만드는 데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도 홍인기 기업지원팀장은 "전라북도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추진체계를 통해 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 태풍 링링 피해 복구계획 확정

전북도는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15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고, 이에 대한 복구비로 124억원을 확정했다.

전북 서해안을 따라 통과한 태풍 링링은 전북지역에 9. 6일 23시 태풍주의보가 발표되어 9. 7일 15시에 해제되었으며, 당시 최대풍속은 부안군 위도에 최대 38.8m/s가 기록되었고, 이 기간 도내 평균 강우량은 12.6mm이다.

이번 태풍으로 부상자 2명이 발생하였고 주택 지붕파손 4동, 파수너와 715ha, 벼 도복 및 농업시설 등 14,235ha의 사유시설 피해가 발생했다. 공공시설 피해는 가로수 944주, 어청

도항 방파제 파손, 부잔교 파손 3개소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조사는 당초 9월 18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태풍이 지나간 뒤 7~10일 후 나타나는 벼 백수 및 갈변립 현상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농작물 피해조사 기간을 9월 25일까지 1주일 연장했다.

복구비용은 중앙정부에서 64억원을 지원받을 계획이며, 도는 29억원, 시·군은 31억원을 각각 부담한다.

사유시설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피해자 1만8075세대에 121억 원이 직접 지원되며, 간접 지원으로도 용자금 7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용자금은 피해자가 농협·수협 등 금융기관에 용자금 지원 신청을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국제납세유예, 지방세 감면, 국민연금 납부예외, 통신요금 감면, 상하수도요금 감면 등 간접지원 서비스도 제공된다.

공공시설은 방파제 등 어항시설 복구에 4억 원을 투입하여 올해 12월까지 복구를 완료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사유시설 피해농가에 대하여 조기경역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추경예산 성립된 사용 및 예비비 등을 적극 활용하여 10월중 재난지원금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빛으로 행복을
서비스로 감동을!

'매우 만족' 한
업무처리와
'사회공헌' 으로

고객님과 익산시를 위해
한전 익산지사가
다가가겠습니다.

 한국전력 익산지사
직원 일동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